



##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2016.12.19. | 송중윤\_새사연 연구위원 |menwchen@mac.com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총선과 여름 종합 대책, 최근 종합대책 보완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량 증가 억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특히 주목해서 할 내용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 수준과 총부채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하는 무분별한 대출, 책임질 수 없는 대출을 막아 총량 증가를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사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계가 대출을 받는 것은 생계유지 때문이다. 즉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빚이라도 내어야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결국 갈 곳은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 뿐이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 그리고 여신전문업체라고 불리는 캐피탈과 대부업체 뿐이다.



##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효과 사라지고 채무상환부담만 가중시켜

거시적으로 볼 때 현 가계부채의 증가는 1) 유동성제약완화 2) 원리금상환부담의 증대를 중심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시중에 자금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금을 흐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대출 유인이 증가하여 더 많은 대출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 기조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저금리 기조는 더 이상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유동성제약완화에 따른 소비 상승과 여기서 비롯된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에 더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제약을 가져온다. 그러면 가계의 삶이 더욱 곤궁해지고 경제성장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를 받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장사하는 민간자산관리회사만 이익을 본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엮힌 데 덮친 격' 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는 이미 빌린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증폭제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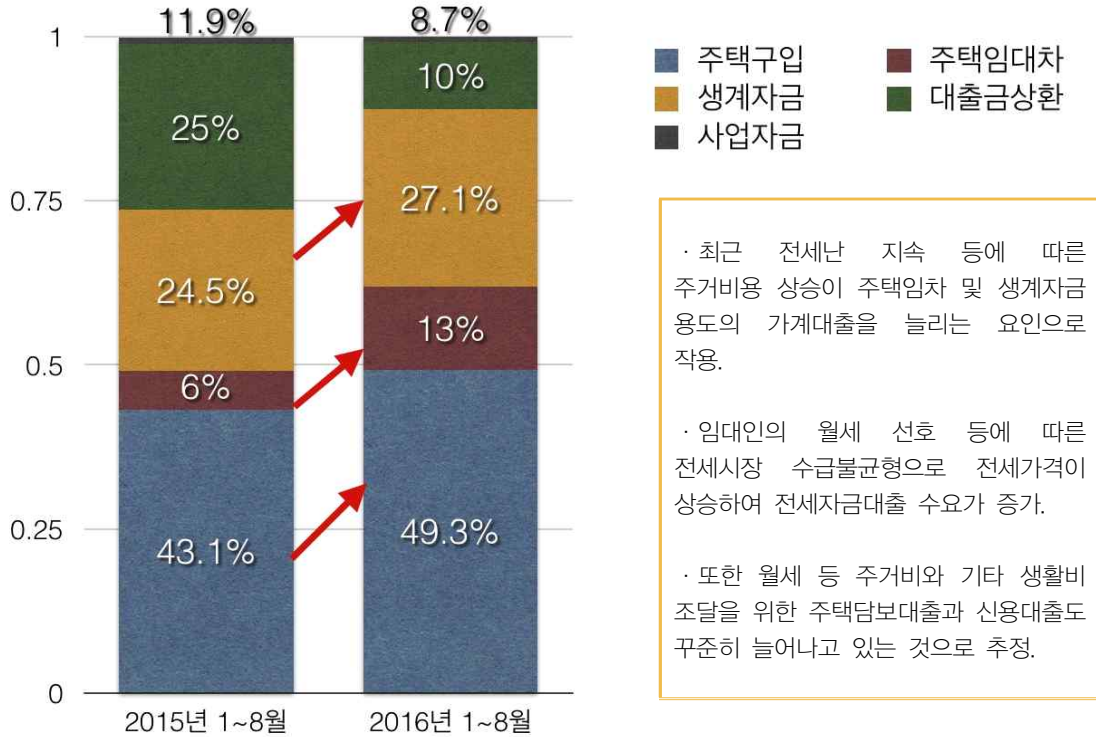
## 올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

현재 가계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렵다. 그 정도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 악화되는 경제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가계대출의 동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이다.** 지난해 1월~8월 동안 생계자금용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24.5%,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6%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8월 생계자금용 대출은 27.1%,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13% 올랐다. 이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아직까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예금취급기관 기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출금상환 목적의 대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월~8월 25%였으나 올해 1월~8월에는 1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생활자금과 주택 임대차 비용에 급하여 그나마 빌려서 갚았던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2015년, 2016년 가계대출 목적별 비중 비교



- 최근 전세난 지속 등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이 주택임차 및 생계자금 용도의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에 따른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
- 또한 월세 등 주거비와 기타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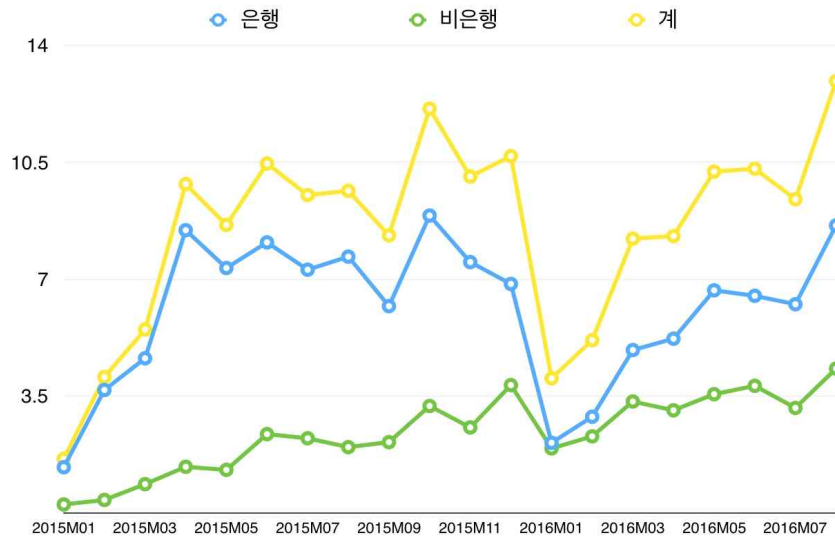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이를 가계부채와 함께 고려하면 2016년 가계부채 대출 동기가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국민경제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이에 반해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치솟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가계가 더 이상 부채 상환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제2금융권과 캐피탈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불행이다.

아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가계대출 총량 증가는 주로 은행권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다. 이 기간 동안 비은행 대출은 증가세가 크지 않고 또한 총량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1분기 이후 총량 증가는 비은행 대출의 증가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말한 은행권 대출심사 엄격화에 따라 생활자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 2] 은행 및 비은행 가계부채 총량 증가 비중



NICE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는 96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은행권 대출은 고신용자에 집중되었다. 금융소비자 1,498만 명 중 1~3등급은 534만 명, 4~7등급은 698만 명, 8~10등급은 266만 명이다. 또한 은행권 1~3등급 대출비중은 2012년 말 69%에서 2015년 말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통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기존 추이를 근거로 파악하면 2016년 이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저신용 금융 소비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2월과 2016년 2월을 비교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중 66%에서 71%로 5%p 증가하였다. 특히 고금리인 대부업 거래자 신용등급별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에 집중되고 있다(행정자치부, 「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5.12.30.). 또한 2015년 6월 말, 기준 대부업 거래자 152만 4천 명 중 7~10등급은 119만 9천 명(78.6%), 4~6등급은 32만 5천 명(21.4%), 마지막으로 1~3등급은 불과 8명으로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비공개 보고서(“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차주의 대출행태 분석 및 도산확률 추정”)는 신용등급 하락을 가계





부채 채무불이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 가계부채의 상황은 얼마가지 않아 대량 가계부채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 저소득층 가계부채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해야

금융위기를 겪은 주요국들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게다가 아직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실채권과 채무불이행 가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통해 부실 모기지 증권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주택시장 지원 정책으로 압류위기에 처한 가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지금도 해당 정책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 채무조정 실적이 부진하다. 공적 채무조정이란 ‘부실채권을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갹생과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IMF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적 채무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나 민간 자산관리회사의 시장 독점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등을 위해 1962년에 설립 하였으며 주로 부실자산 인수 및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그 중 일반 부실채권 매입 정리기능은 민간기관과 일부 경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민간에서도 부실기업 정리업무에 참여함에 따라 민간기업과 일부 경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외환위기 시 인수 한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기능인 부실채권정리 기금관리는 2012년 12월까지 수행 (<공사법> 부칙 제2조 제4항)하도록 하였고 **일반 부실채권(공사 고유계정)관련 업무 중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관련 자산을 조속히 매각·위탁하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향후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기획재정부, 2013)



추진실적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정리 진행 중</li> <li>◦ <b>일반부실채권 관련 민간경합 업무기능축소 완료</b></li> <li>- 무담보 부실채권 추심업무 민간업체 위탁 (09.4.1.)</li> <li>- 업무방법서 개정(08.12.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정리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청산</li> </ul>

위 두 개의 인용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공적 채무조정을 실효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불법 또는 과도한 추심 행태가 만연하다.

2012년 박근혜는 대선 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공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1조 원 근거자산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18조 원을 조성 이를 322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다만 2013년 금융기관에 각출하여 6,970억 원을 조성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채무조정, 전환대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밝힌 것처럼 국민행복기금은 공적 채무조정은 커녕 비싼 가격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되팔고 있고 게다가 이 과정에서 과잉 추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287만 명의 부실채권을 2.1% 가격으로 매입하여, 1조 6,517억 원을 추심하고 매입 금액 5,912억 원 대비 280%의 수익을 올렸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공적 채무조정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이 논리에 입각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형태로 회수율만을 보고 일한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은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 2016년 현재 가계부채 총량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공적 채무조정을 실시하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자산관리공사가 독점하고 있어 오직 수익만을 쫓고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회사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



[표 1]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통합관리 대상 채권 규모

구 분	채무자수 (만 명)	채권금액	매입금액*	매입대금 비율	회수금액	수수료
개별매입	11	1조	1,541억	15.4%	1,498억	주)
일괄매입	99	9조6,000억	4,371억	4.6%	4,377억	
공적기관	178	17조4,000억	0	0	10,642억	
신용회복기금	74	5조5,000억	0	0	4,712억	주)
희망모아	94	11조1,000억	0	0	5,327억	1,140 억
한마음금융	10	8,000억	0	0	603억	162억
합 계	287 중복제외	28조	5,912억	2.1%	1조6,517억	6,302 억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기금의 사업비용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16.9월 말 현재 총 사업비용은 약 5천억 원

\* 채권양도기관은 채권양도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채권금액과 현금의 차액을 출자(초과이익 공유) 또는 사후정산조건부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신용회복기금의 일부는 확정매입)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2월 1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연담하기	황서연,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중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씩쓸이'	정승일
경제	11/21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②	김영석
경제	11/25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정승일
마을	11/29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강세진
경제	12/5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정승일
마을	12/12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최정은
경제	12/16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정승일
경제	12/19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송종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